

### 4·5 전주를 후보자들, “국민연금 서울 이전 반대” 한목소리

# 인구유출 막을 방법 ‘일자리 창출’

오는 5일 이삼직 전 의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채러지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의 막판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다.

뉴스는 지역 현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전북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6명의 후보에 공통 질의했다.

5명의 후보들은 답을 보냈지만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서울 이전설’에 대해 ‘서울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소멸 위기 속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그 방법은 모두 달랐다.

부의 서울 재이전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파행적 발상이다. 전복을 금용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울 이전 불가 입장을 직접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국민연금 이전설은 대통령의 해프닝으로 끝난 시간이지만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탄탄한 논리 무장이 필요하다”며 “전북의원 10명과 전북 연구 의원 38명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고, NH농협은행과 같은 민속산업을 농도 전북에 유치하고 1.117개의 지점만 전국 지점만 체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점을 살려 전북의 자산운용력을 크게 신장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 인구유출 막을 방법은 ‘일자리 창출’

전북에는 매년 신생아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한 정책으로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달랐다.

김경민 후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전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전주의 산업생태

출법은 전북이 다양한 정책의 선도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당장 혁신적 저출산 대책을 전북에 적용하고 이를 모델로 정부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출산 친화적인 과감한 세법개정(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출산가정에 생활비 직접 지원(양육부담 한쪽 최대 월 300만원 자녀 수 고려한 청년주택 제공(아이) 낳으면 원금 탕감), 청소년층 대중교통 무상 이용(경로우대에서 청소년 우대도 병행) 등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중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효도수당 월 200만원 지급한다면 일자리 등을 위하여 타지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전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면 3대가 모여 살면 월3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가족을 회복하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의 인구 증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호서 후보는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청년으로 지정하고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보육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과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과 결혼준비금 등 각종 장려금 지원이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제화하고 집값 부담 해소, 질 좋은 공공 보육시설 늘리기,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산의료원 운영을 책임질 원장으로 조준필 전 경기도의료원장을 임명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은 불가”

매년 삼삼할까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론에는 모든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서울보다는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전주가 중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에는 전북혁신도시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 있다면서 “전주는 연금금을 특화한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 중인데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국책은행 유치에 해아한다. 당신이 될 경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도부 등을 살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

### “기금본부, 전주가 중장기적으로 더 유리” 입장도 일자리 창출 방식에 후보자들 간 조금씩 입장 달라

무소속 김광중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알짜 기업들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고 자녀 교육에 유리한 서울 등지에 위치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전주에 교통·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서울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싱가포르나 핀란드 발전 전략이 우리의 벤치 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국민연금 법에는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둔다고 명시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 등은 법률상 정당한 문제”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서류를 발미로 서울로의 재이전 여론을 형성하려는 불순한 의도 역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금융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추가 이전해 전북을 제3 금융중심

계를 4차산업 디지털플랫폼 경제로 대전환하고 드론, 도심항공, 자율주행 등을 수소·탄소산업과 연계한다.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이뤄지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전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희 후보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면서 “금융과 수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협중앙회 이전, 금융공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또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전주 청년이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국립 공공보육시설 50%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의무 채용도 추진해아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후보는 “내년 특별자치도

### 민주 전북도당 “김기현 대표 대광법 조건부 협력 발언 취소하라”

도당 “낙후된 지역 교통환경 불모 표 얻고자 하는 협박성 발언”

김기현 국회 대표, 전주를 유세현장에서 “후보 당선시 통과 약속”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3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날 김기현 대표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정당 소속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주와 전북의 현안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회 후보가 당선되면 대광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늘

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는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중장기적 발전 방안 중 하나이며 절대적 유산 사업으로 손꼽히는 대광법이 보류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돕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며 일갈했다.

도당은 “김기현 대표는 유세를 통해 전북은 철도와 도로가 낙후돼 있다고 언급할 만큼 대광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안을 여당과 부처의 비협조로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안건을 보류시켜놓고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적 제안이 아닌 협박을 일삼았다”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광법 통과가 또다시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류되면서 전북의 중차대한 발전 방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 앞에서 김 대표는 썩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협박성 발언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

### 4·5 전주를 재선거 D-2... 후보자 ‘말·말·말’

#### “尹 심판·철새정치 퇴출의 날”

진보당 강성희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주를 국회의원 후보가 3일 선거 이틀을 앞두고 “4월5일은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의 날”이라며 “진보당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이 전주를 지켜보고 있고 전주가 호남 정치 선도하는 정치개혁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진보당 강성희 당선은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과 관련 “1~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며 “진보·민주 표가 분산

되면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이 실패할 수 있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상대 후보인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제기한 진보당 보리쌀 살포와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검찰이 기각( 반려)한 것으로 경찰의 불법 체포 부정 선거개입이 확인된 것”이라며 “(진보당은) 부정선거한 사실이 없다. 무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임정엽 후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주와 미래세대 위한 위대한 선택 기대”

무소속 임정엽 후보

무소속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선거 이틀을 앞두고 “지금 전주·전북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 임정엽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선거는 일 잘하는 임정엽을 뽑아 전주 발전을 앞당길 것이냐 반미를 부르짖는 진보당 후보를 뽑아 전주를 이념 투쟁의 근거지로 만들고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효자·삼천·서산동 유권자들께서 전주와 미래세대를 위해 위대

#### 전주를 거주 청년들 “지역출신 일꾼 뽑아야”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번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역출신 일꾼을 뽑아아한다고 주장했다.

20대에서 40대까지 구성된 전주를 지지자이동본부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지역구는 전북 정치 1번지이며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존재는 지역 발전과 민심을 대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는 애항복본인을 뽑아아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 충실히 수행해달라”

김관영 도지사, 조준필 신임 군산의료원장 임명

경기도의료원장 역임하는 등 의료분야에 정통 조신임 원장 “진료 역량 강화 등 최우선 추진”

김관영 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준필 신임 군산의료원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신임 조준필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연세의료원과 아주대학교에서 3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장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국제인전도시공인센터 부의장에 선출돼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베트남 등 국외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외 100여 개 지자체의 공인인증 평가에 참여한 바 있다.

조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최고책임자로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 군산의료원장에 지원하게 됐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 원장은 “군산의료원을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의료원 직원들과 비전 공유 및 의사소통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되 등 가뜰이나 재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투표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실제 사전투표인 지난 달 31일과 1일 양일간의 전체 투표율이 10.51%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 선거막판 빚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에 싫증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특별취재반

일이 있었다. 진보당은 전주시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보리쌀 누령 진보당 당원 사냥 등 허위문자를 무차별 발송하며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책임자라고 한 강 후보는 더 이상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임 후보는 “최근 진보당 공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긴급체포된

무소속 김호서 후보

무소속 김호서 전주를 국회의원 후보가 일부 후보들의 이전투구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정치 놀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호서 후보는 3일 선거 이틀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를 재선거가 일부 후보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과연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들끼리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되는 등 가뜰이나 재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투표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실제 사전투표인 지난 달 31일과 1일 양일간의 전체 투표율이 10.51%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 선거막판 빚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에 싫증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특별취재반

되는 등 가뜰이나 재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투표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실제 사전투표인 지난 달 31일과 1일 양일간의 전체 투표율이 10.51%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 선거막판 빚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에 싫증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특별취재반